

## 충남도와 국책연구기관 간 제1차 미래이슈 공동포럼

- 주 제 : 미래이슈-인구가구가족
- 일 시 : 2016.09.07.(수) 16:00
- 장 소 : 충청도청 소회의실 302호





# 충남도와 국책연구기관 간 제1차 미래이슈 공동포럼

◆ 국책연구기관과 충청남도 간 상호 교류 증진 및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미래이슈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일련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함

## ■ 행사개요

- 주 제 : 미래이슈-인구가구·가족
- 일 시 : 2016.09.07.(수) 16:00
- 장 소 : 충청도청 소회의실 302호
- 주요참석 : 외부전문가, 도 공무원, 충남연 등
- 주 최 : 충청도청 • 충남연구원

## ■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2	개회사	사회: 충청도청
16:03~16:05	인사말	도 기획조정실장
16:05~16:30	주제발표1: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 간 격차	서용석 박사(한국행정연구원)
16:30~16:55	주제발표2: 가족변화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김유경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55~17:10	지정토론 - 모 선 희 교수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오 용 준 박사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	좌장: 송두범(충남연 미래전략연구단장)
17:00~17:50	자유토론	
17:50~17:55	폐회	사회: 충청도청

## 주요참석

번호	소속	성명	부서 및 직급	비고
1	충남도청	김 용 찬	기획조정실장	
2	충남도청	조 원 갑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3	한국행정연구원	서 용 석	국제행정협력센터 연구위원	발 표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유 경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발 표
5	공주대학교	모 선 희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6	충남연구원	송 두 범	미래전략연구단장	좌 장
7	충남연구원	오 용 준	지역도시연구부장	토 론
8	충남연구원	홍 원 표	미래전략연구단 책임연구원	

## 미래이슈포럼(3차 계획)

	일 시	장 소	주관	주요내용
1회	9. 7(수)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충남연구원	인구·가구·가족
2회	10.19(수)	내포신도시	세종미래전략연구포럼	지방분권화
3회	11. 9(수)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충남연구원	지역 경제·일자리



#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서용석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정의

---

2016. 9. 7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 목 차

---

1. 세대 간 정의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3.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제언

# 1. 세대 간 정의

---

## 1. 세대 간 정의

---

### 정치란 무엇인가?

---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 네이버 사전 –

## 1. 세대 간 정의

### 정치란 무엇인가?



삼봉 정도전

“정치란 나눔이요...분배다.  
즉, 누구에서 거둬서 누구에  
게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 육룡이 나르샤 중 —

5

## 1. 세대 간 정의

### 정치란 무엇인가?



다산 정약용

“정치라는 것은 올바르게  
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며,  
백성들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해주는 것”

— 탕론(湯論) —

6

## 1. 세대 간 정의

###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가치와 자원의 권  
위적 배분이다 (Politics  
are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and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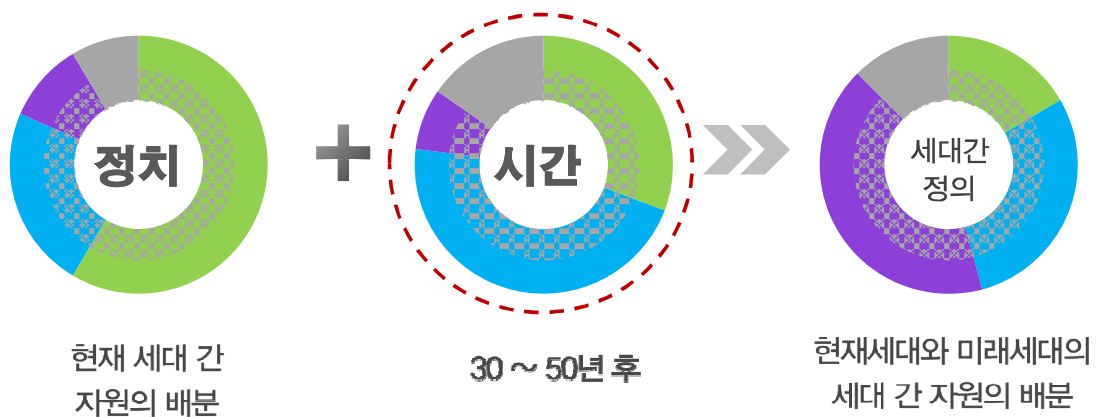
The Political System, 1953

데이비드 이스턴 (David Easton)

7

## 1. 세대 간 정의

### 정치와 시간(time)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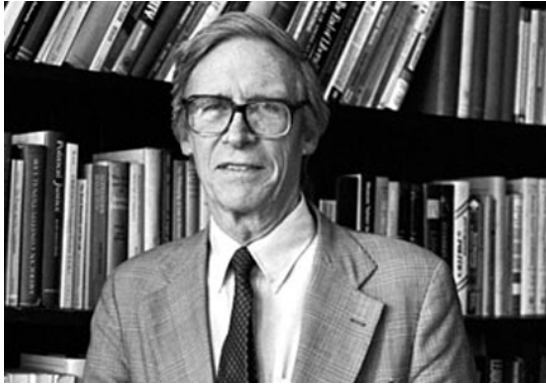


8



## 1. 세대 간 정의

###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 란?



존 롤스 (John Rawls)

“동시대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시대에 속하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책무가 있다. 각 세대는 문화와 문명의 장점들을 보존하고, 국부(國富)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당대(當代)에 적절한 양의 자산을 축적해 후속 세대에 넘겨줄 의무가 있다”

A Theory of Justice, 1971

9

## 1. 세대 간 정의

###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 란?



Edith Brown Weiss

“세대 간 정의란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평한 자원배분을 추구하는 것”

“세대 간 권리란 개인에 의해 우선적으로 소유되는 것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의 다른 세대들과 관련되어 보유되는 권한”

Intergenerational Fairness and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1992

10

# 1. 세대 간 정의

## 미래세대 (future generations), 그들은 누구인가?

❖ **Jim Dator (Dator, Pratt and Seo, 2006: pp.25-26)**

“현재 우리가 사는 방식에 따라 미래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직접적인 생물학적인 자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후손들로, 현세대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결코 우리에게 감사를 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 할 수 없는 사람들”

❖ **Jonathan Glover (Future People, Disability, and Screening, 1992)**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투표권을 갖거나 권력을 얻을 수도 없으며, 잠재적으로 현세대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며 가까운 미래에 등장하는 사람들”

❖ **Edward A. Page (Climate change, justice and future generations, 2006)**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후에 존재하게 될 세대를 의미하며, 오늘날의 아이들부터 무한한 미래의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 **Burns H. Weston (Climate Change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2008)**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현재를 사는 사람들과의 연계를 반영하는, 즉 최소한 오늘부터 태어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

❖ **이지순·서용석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조건, 2011)**

“현세대의 결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아직 미성년이거나 태어나지 않은 관계로 그들의 목소리를 현실 정치에 반영할 수 없는 사람들”

11

# 1. 세대 간 정의

## 왜 미래세대인가?

❖ 현 세대의 무분별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

❖ 현 세대의 성장과 소비를 위한 유한한 자원의 착취

❖ 현 세대의 과도한 복지 확대에 의한 국가 부채 증가와 미래세대의 복지 잠식

➢ 특히, **인구구조변화**는 미래세대의 권익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으며, 세대 간 자원 배분을 왜곡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12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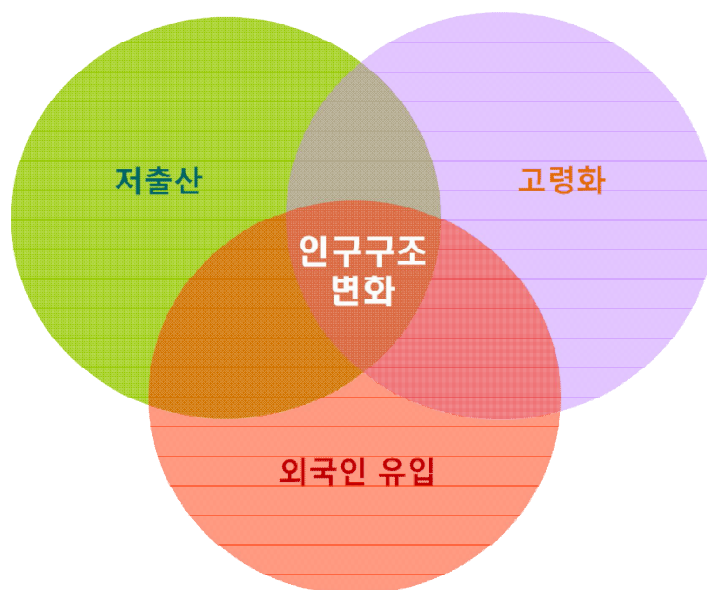
---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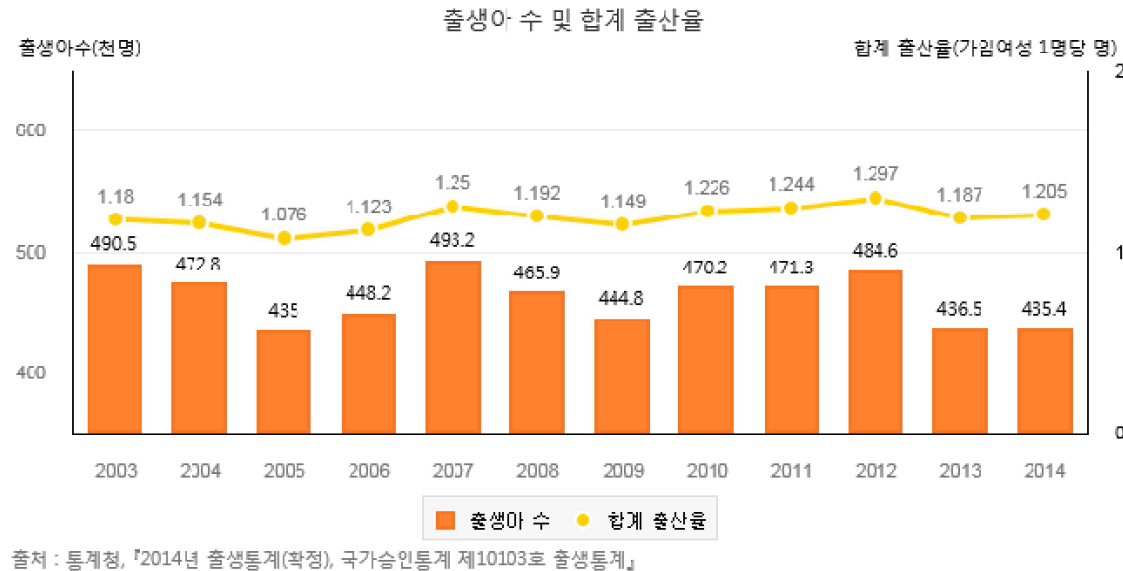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견인하는 3대 요소

---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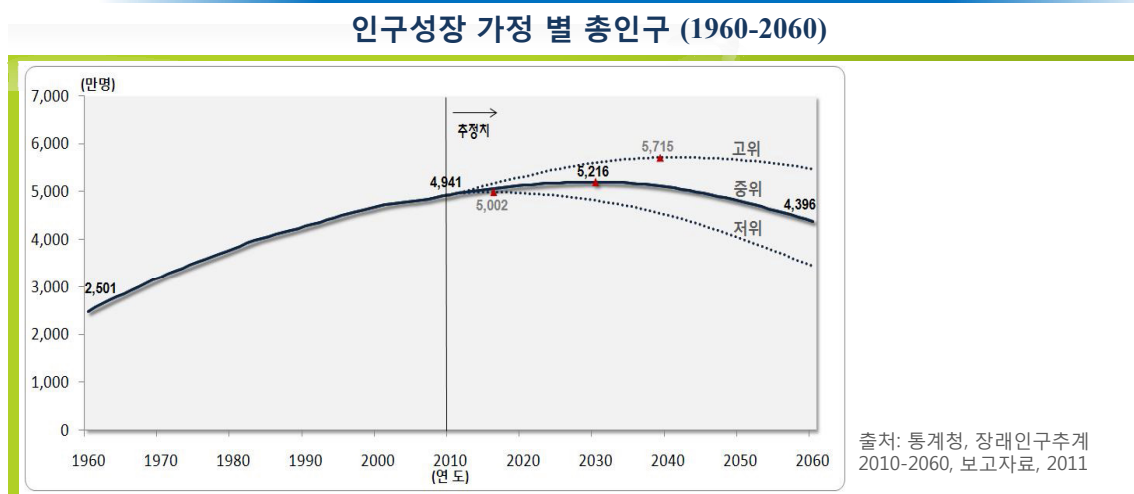
### 저출산: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



15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저출산: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



- 인구성장 중위가정에 따르면, 총인구 2010년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까지 성장, 이후 감소하여 2060년에 4,396만 명 수준  
- 인구 저성장 가정 시, 인구정점은 2016년(5,002만명)으로 이동, 2060년 인구는 3,447만명
- 인구성장률은 2010년 0.46%, 2020년 0.28%, 203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 2060년 -1.0% 수준

16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저출산: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

통계청 인구추계 (201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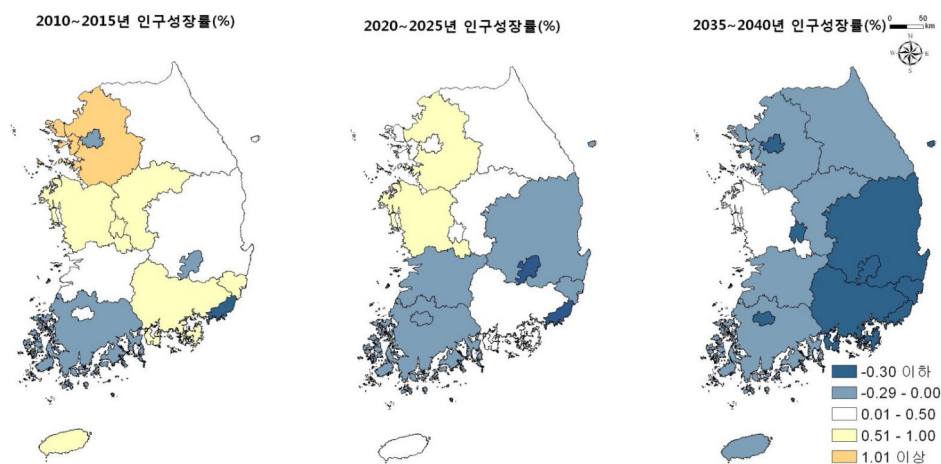
연도	2010	2020	2030	2040	2050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추계인구	추계인구	추계인구	추계인구
계	48,874,539	49,325,689	48,634,571	46,343,017	42,342,769
0-4 years	2,201,465	1,919,300	1,815,629	1,398,120	1,159,021
5-9 years	2,517,298	2,050,833	1,836,282	1,606,387	1,238,746
10-14 years	3,188,145	2,148,028	1,873,425	1,772,722	1,365,314
15-19 years	3,402,266	2,439,986	1,988,684	1,781,161	1,558,454
20-24 years	3,113,166	3,111,552	2,097,211	1,829,895	1,732,074
25-29 years	3,720,641	3,359,827	2,411,879	1,966,570	1,762,002
30-34 years	3,828,448	3,085,598	3,087,235	2,082,471	1,818,163
35-39 years	4,270,214	3,684,395	3,332,959	2,394,632	1,954,366
40-44 years	4,184,430	3,766,996	3,042,560	3,049,122	2,059,522
45-49 years	4,191,988	4,180,791	3,619,510	3,282,339	2,363,378
50-54 years	3,907,712	4,095,839	3,705,948	3,004,592	3,020,697
55-59 years	2,805,204	4,069,941	4,087,286	3,557,272	3,239,690
60-64 years	2,186,709	3,711,478	3,925,256	3,576,827	2,915,585
65-69 years	1,811,334	2,580,776	3,791,545	3,849,797	3,380,238
70-74 years	1,526,896	1,908,063	3,314,792	3,571,336	3,303,187
75-79 years	1,066,945	1,429,479	2,123,530	3,208,091	3,342,112
Over 80	951,678	1,782,807	2,580,840	4,411,683	<b>6,130,220</b>

17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인구구조변화의 지역간 불균형 심화

시도별 인구성장률, 2010-204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보고자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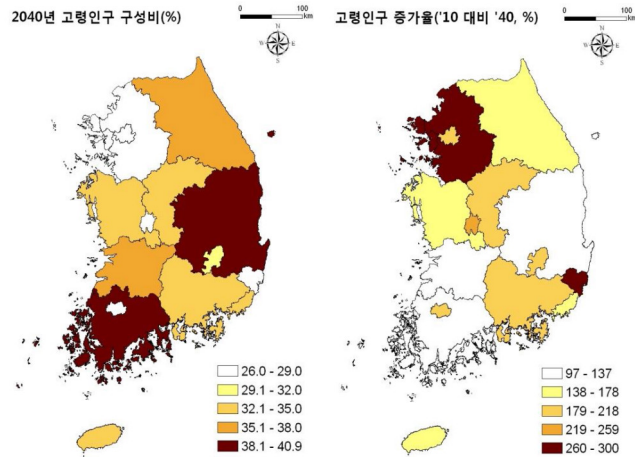
통계청 권역별 인구증감 추계에 따르면, 2040년까지 수도권과 중부권 인구는 2010년 대비 각각 192만명(7.9%)과 65만명(9.8%) 증가할 것이나, 영남권과 호남권은 각각 76만명(-5.9%)과 13만명(-2.3%)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

18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인구구조변화의 지역간 불균형 심화

2040년 시도별 고령인구 구성비 및 인구 증가율 (2010 대비)



2040년에는 경기를 제외한 도지역 및 부산은 고령자가 전체 인구 3명중 1명 넘을 것으로 전망. 2040년 고령자 비중은 전남 42.5% 강원은 38.7%로 가장 높고,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인 광주, 대전, 경기도 27~28%를 넘을 것으로 예상

19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외국 인구의 급속한 유입

우리나라의 외국인 등록 인구 (2004-2013)

(단위 천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체류외국인	679	751	747	910	1,066	1,159	1,168	1,261	1,395	1,445	1,576
불법체류자	154	210	204	212	223	200	178	168	168	178	183

자료: 법무부(2014). [출입국관리소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재수정.  
※ 천명 이하 숫자는 반올림 처리

2003년 67만 9천명 수준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3년 157만 6천여 명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국내 총인구의 3%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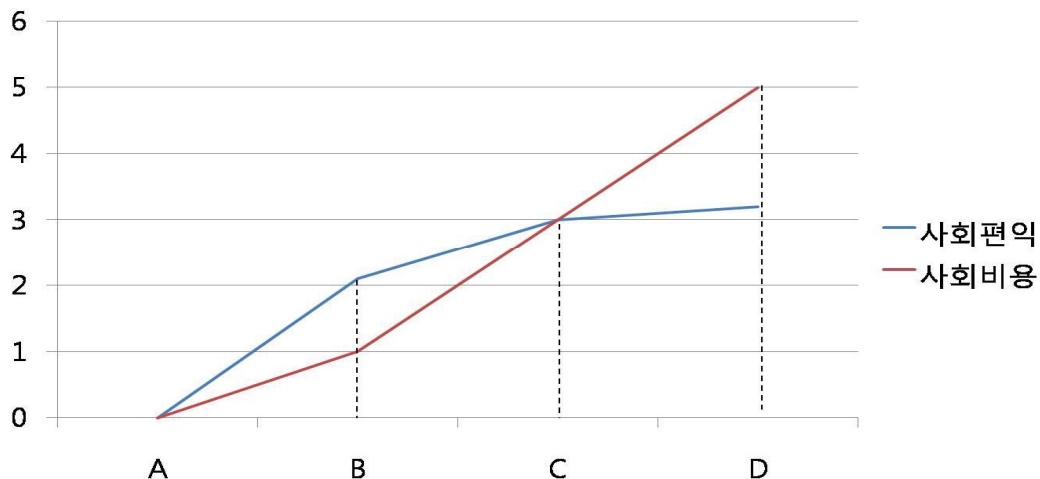
법무부 미래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0년 254만 명으로 증가한 후, 2050년에는 409만 명을 기록하여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법무부, 2006).

20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외국 인구의 급속한 유입

외국인 유입비용과 편익 간 함수관계



-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한 대량 해외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유일한 해결???

21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인구감소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

####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문제

- 경제성장의 정체 및 축소: 내수시장과 총수요 감소, 이로 인한 세수 저하와 자본시장 위축, 잠재 성장률 하락
- 연금, 보험, 의료 및 기타 사회복지 등의 확충으로 인해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급격히 증가시켜 국가재정의 부담 가중
- 노년층의 인구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사회는 보수화되고, 혁신은 지체
-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

####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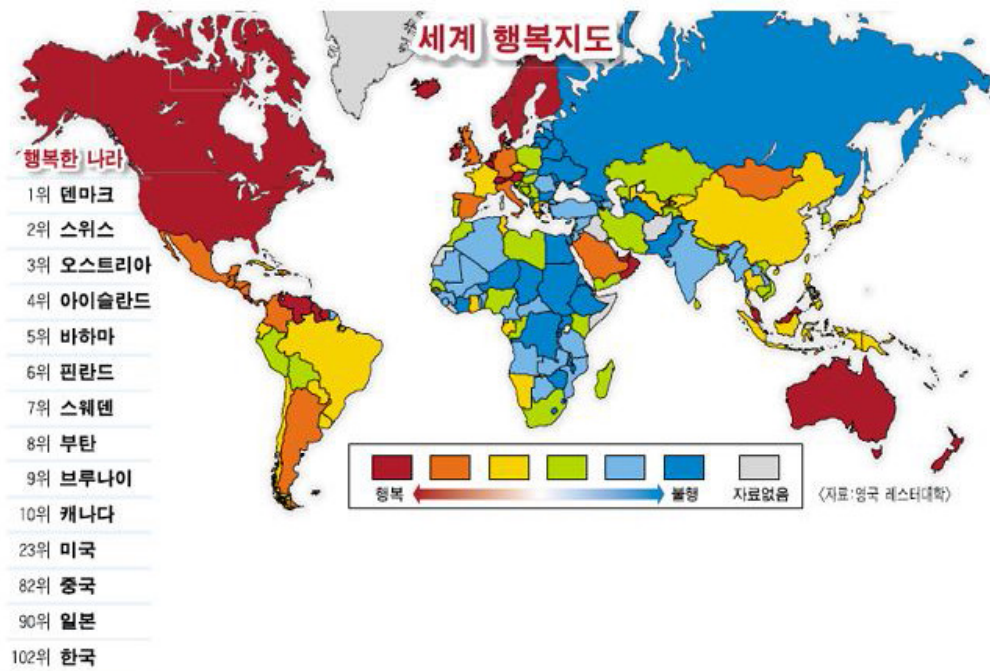
- 질적 경제로의 이동: 경제 파이가 작아져도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여유롭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성숙한 경제로의 이동
- 삶의 질 향상: 교육, 주택, 교통문제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인구과밀로 인한 공나물 교실, 주택난, 교통 지옥, 치열한 경쟁으로부터의 해방
- 쾌적한 환경 구현: 인구 감소를 통해 오염 물질을 줄이고,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원 고갈을 완화를 통해 쾌적한 환경 구현
-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한 실버산업의 성장

22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인구감소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



23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인구감소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



“출산율 하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줄어든 인구에 대한 적응 방안으로 생산성 증가를 위한 기술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인구 감소 곡선이 국내총생산(GDP) 감소 곡선과 일치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조지 프리드먼, 2014)

“인구가 감소해 국가의 GDP가 감소하더라도 국민 1인당 소득은 줄어들지 않는다. 또 일할 사람이 줄어들수록 노동력은 귀해지므로 기업은 임금을 올리고 근무 시간은 단축하는 등 복지 문제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마쓰타니 아키히코, 2005)

24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출산제고, 과연 가능한가?: 출산제고 회의론

“인구 감소는 한 번 진전되면 되돌리기 힘든 비가역적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인구감소가 시작하면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간은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출생률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해도, **인구증가에의 기여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Teitelbaum and Winter, Wattenberg 1987)

“출산제고와 관련한 많은 정책이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정책도 획기적인 출산율 증가를 가져오는데 실패 하였다.” (McDonald, 2002)

“한번 저출산 국면에 접어든 국가가 이를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저출산의 덫’** 때문이다. 저출산 국가는 이상적인 가족 크기의 감소, 인구의 고령화, 노동시장의 영향 등으로 인해 계속 아이를 낳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Balter, 2006)

“출산율 저하의 핵심은 **사회구조변화**다. 농업시대에 자녀는 노동력이자 자산이었다. 노후 대비도 가족에 의존해야 했으니 대가족이 유리했다. 하지만 성숙한 산업사회에서 자녀는 생산 도구가 아니라 소비의 대상이다. 비용은 많이 들고 되돌아오는 것은 적다. 자녀를 적게 낳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이자 이성적 판단이다.” (Allen Wiseman, 2014)

“오르지 않는 출산율보다 더 큰 문제는 무용지물인 출산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탈리아·독일·이란 등 여러 나라가 출산장려금과 수당을 주고 보육을 지원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 (Allen Wiseman, 2014)

25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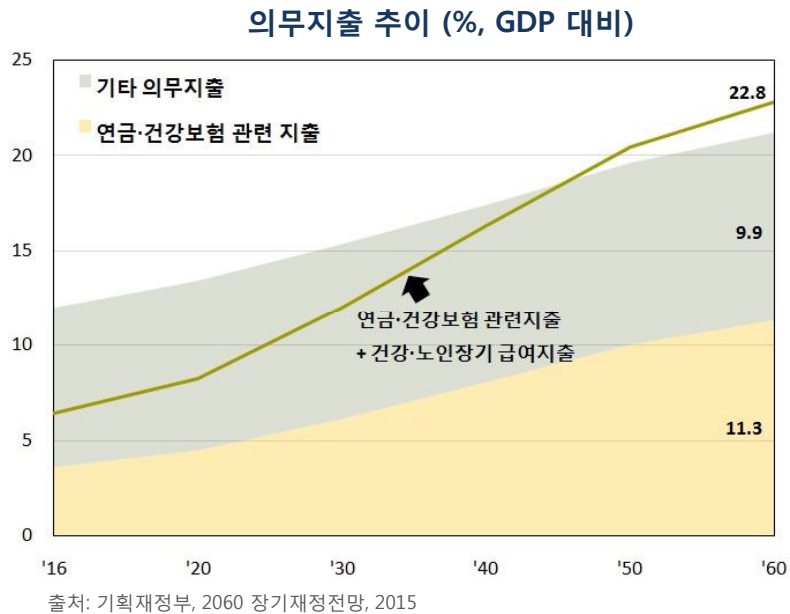
### 출산제고, 과연 가능한가?: 프랑스의 출산제고 정책

- ❖ 여성의 사회진출이 본격화된 19세기 말부터 직장과 육아 병행의 문제 이슈화
- ❖ 1881년 세계 최초의 공립 유치원 설립
- ❖ 1913년 출산휴가를 허용하는 민간기업 출현
- ❖ 1917년 출산장려 정책으로 가족수당 도입
- ❖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부터 매년 GDP의 4% 정도의 예산을 출산장려에 투입
  - 프랑스 국민들은 많은 액수의 세금을 흔쾌히 지불
- ❖ **출산제고 정책은 오랜 시일이 걸리며, 투자한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더디게 나타남**
  -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며,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출산제고 정책을 추진

26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저출산 · 고령화의 진전과 미래세대와의 영향: 재정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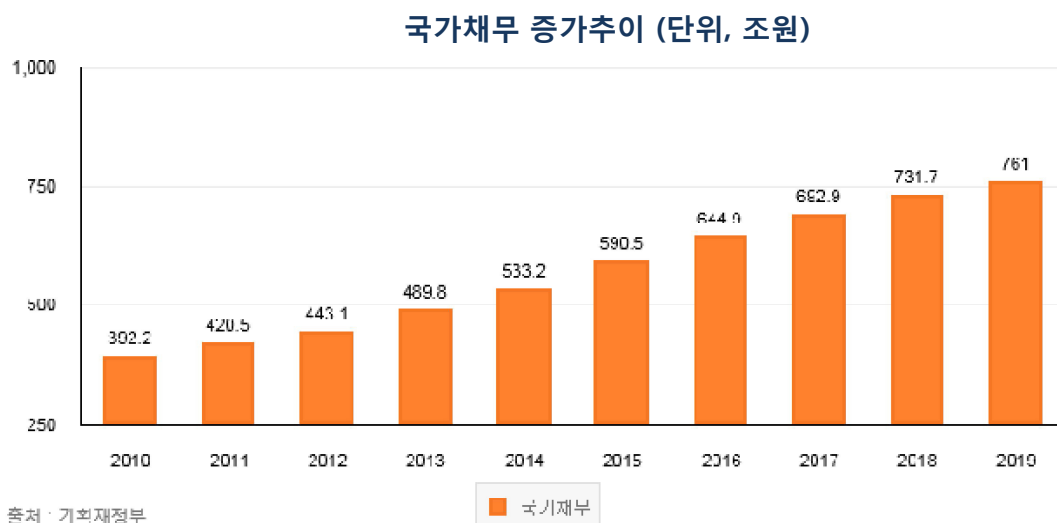


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급여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

27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저출산 · 고령화의 진전과 미래세대와의 영향: 재정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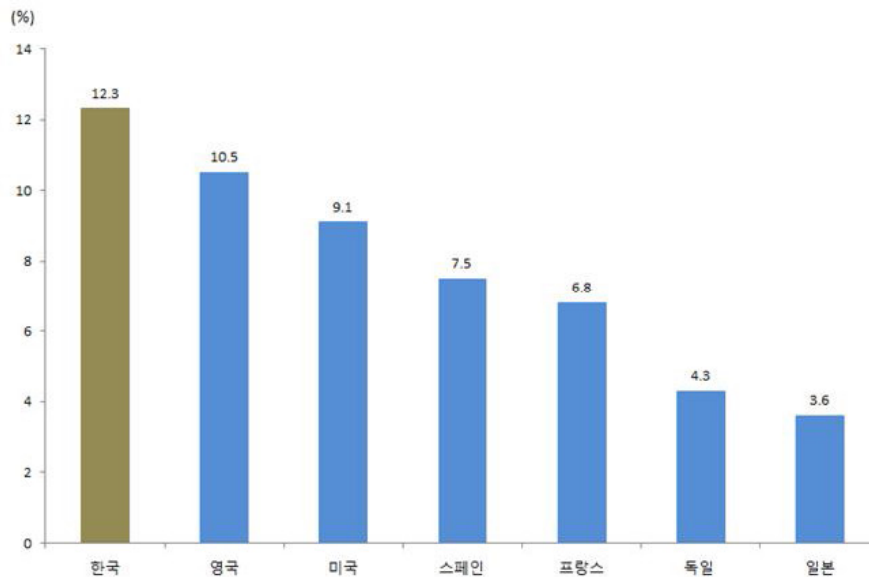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 218.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10).

28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저출산 · 고령화의 진전과 미래세대에의 영향: 재정 부문

주요국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2000~2013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4

29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저출산 · 고령화의 진전과 미래세대에의 영향: 사회 부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세대 간 갈등 심화

- 2005년에는 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던 것이, 2050년이 되면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
- 현역 세대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세대 간 갈등을 유발

30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저출산 · 고령화의 진전과 미래세대와의 영향: 정치 부문

연령대별 선거인 비중 변화 20대 총선은 행정자치부 1월 주민등록 통계. 단위: %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박근혜 대통령	20대 총선 (예상)	-1.6	15.9	18.3	21.2	19.9	23.1
	6회 지방선거 (2014년)	-1.7	16.0	19.2	21.7	19.7	21.6
이명박 대통령	18대 대선 (2012년)	-1.8	16.3	20.1	21.8	19.2	20.8
	19대 총선 (2012년)	-1.8	16.6	20.5	22.0	18.9	20.3
	5회 지방선거 (2010년)	-1.6	17.8	21.4	22.4	17.1	19.4
	18대 총선 (2008년)	-1.6	19.2	22.7	22.6	15.6	18.3
노무현 대통령	17대 대선 (2007년)	-1.7	19.4	22.9	22.5	15.4	18.1
	4회 지방선거 (2006년)	-1.7	20.3	23.6	22.6	14.6	17.2
	17대 총선 (2004년)		22.1	24.9	22.8	13.2	16.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대 총선에서는 60대 이상이 27.8%, 22대 총선에선 32.3%로 증가할 전망

31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저출산 · 고령화의 진전과 미래세대와의 영향: 정치 부문



#### 실버 민주주의의 도래

- 정치권은 국민전체나 미래세대보다 실버 세대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실버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 미래의 20대와 30대는 정치적 minority로 전락
  - 미래의 민주주의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에 의한, '고령자'의 정치

32

## 2.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격차

### 우리의 선택은?: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한 4가지 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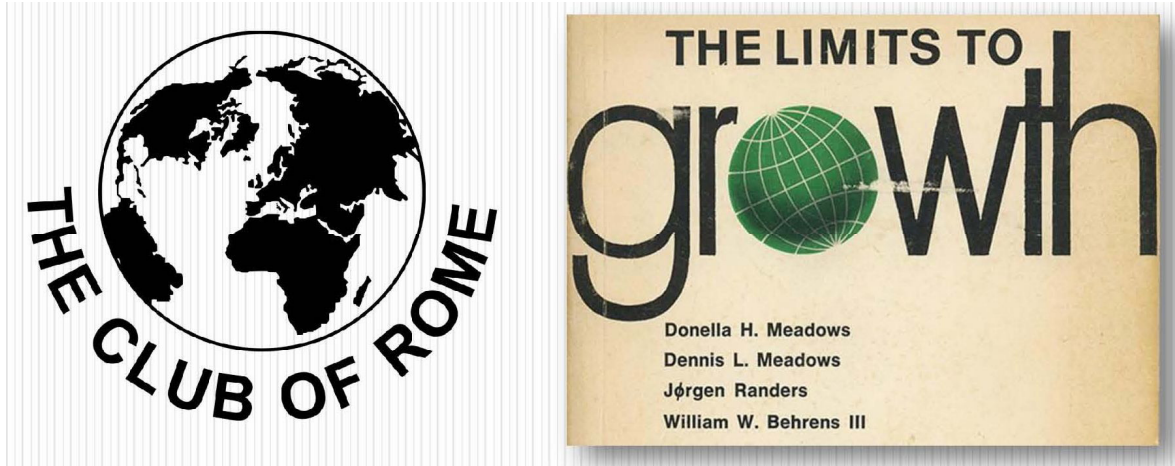
33

## 3.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제언



### 3.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제언

#### 세대 간 상생을 위한 노력들: 국제기구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 지구의 환경과 자연자원은 현재와 미래세대 공동의 유산이므로, 현세대의 인류가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미래세대를 위해 일정 양을 보존해 두어야 함 (1972)

35

### 3.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제언

#### 세대 간 상생을 위한 노력들: 국제기구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UN에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 (1987)

36

### 3.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제언

#### 세대 간 상생을 위한 노력들: 국제기구

- ❖ UN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및 “미래세대 권리 선언과 권리장전 (A Bill of Rights for Future Generations)” 선포 (1992)
- ❖ UNESCO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resent Generations towards Future Generations) (1997년 제 27차 파리 총회)
- ❖ 미래세대의 권리를 위한 재단 (The Foundation for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FRFG) 미래세대를 위한 유럽 가이드라인(European Guardian for Future Generations)’(2002)

37

### 3.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제언

#### 세대 간 상생을 위한 노력들: 개별국가들의 헌법 조항

##### 네덜란드 헌법 제21조

“정부의 관심은 국가를 거주 가능한 것으로 유지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2007년 이탈리아 헌법 제9조 제2항

“미래세대를 위해 이탈리아의 풍경과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

##### 2005년 포르투갈 헌법은 제66조 제2항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문화적 작품들을 보전해야 한다.”

##### 독일 헌법 제20조

“헌법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에서, 각 주는 법안과 법률에 따라 천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2002)

##### 독일 헌법 제 20조 제109항

“세대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국가의 채무 한계를 정한다** (2006)”

38

### 3.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제언

#### 세대 간 상생을 위한 노력들: 제도 혁신 사례



##### ❖ 노르웨이(Norway): 미래세대를 위한 '석유기금법' 제정

- 1990년 '석유기금법' 제정을 통해 **현재의 부를 미래세대도 향유**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석유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최대한 축적해 석유 이후를 대비하고, 자연이 준 부를 미래세대에 물려주자는 취지
- 석유기금을 국가재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제화하여 행정부의 기금사용을 엄격히 제한

39

### 3.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제언

#### 세대 간 상생을 위한 노력들: 제도 혁신 사례



## Commission for Future Generations

##### ❖ 이스라엘 의회 미래세대위원회(Committee for Future Gene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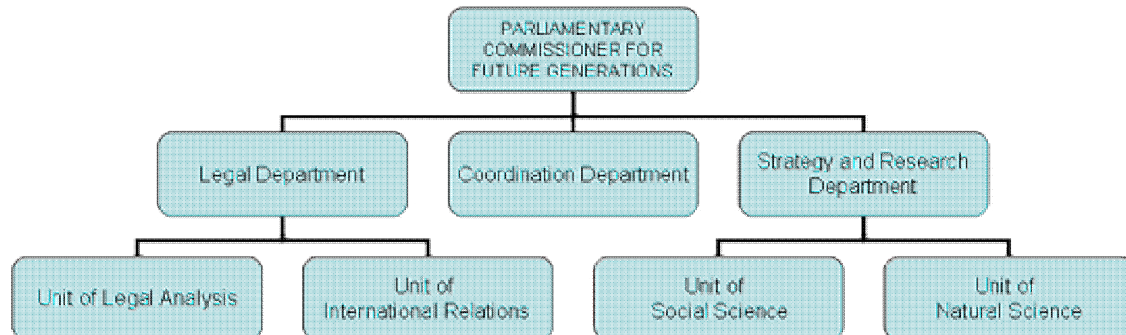
- 미래세대의 권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세대 간 상생의 관점에서 입법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2001년 설립
- 이스라엘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미래세대 관련 아젠다를 발굴하고,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법안, 법규,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제공

40



### 3.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제언

#### 세대 간 상생을 위한 노력들: 제도 혁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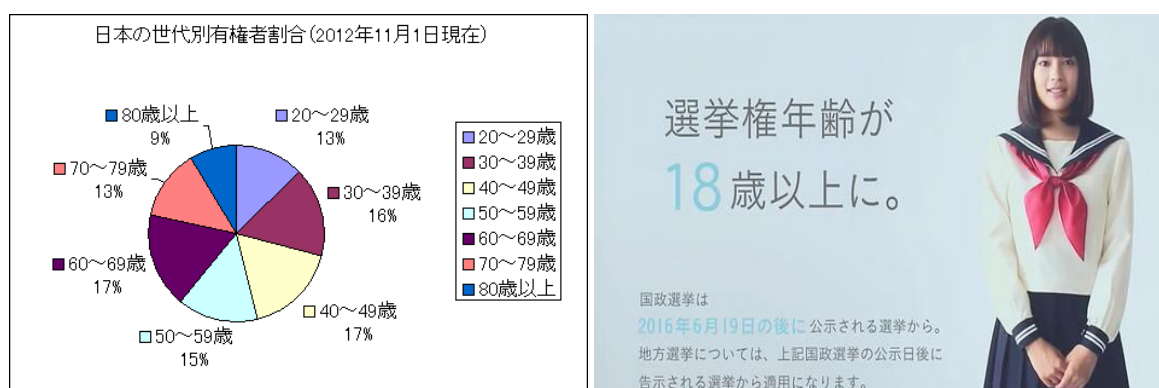
#### ❖ 헝가리 의회 미래세대위원회(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Future Generations)

- 현세대의 탐욕으로부터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설립
- 환경 감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미래세대의 후견인으로 서 중앙 및 지방의 '지속가능'과 관련한 모든 입법 및 정책을 옹호하는 활동을 수행

41

### 3.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제언

#### 세대 간 상생을 위한 노력들: 제도 혁신 사례



- 일본 2016년 6월 19일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현행 '지역 기반'의 선거구에서 '연령·세대 기반'으로의 선거구 개편
- 투표 연령 미만의 아이를 위해 부모가 1표를 행사하는 방법 (Demeny 투표법)
- 고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20대 30대에 투표권 가중치 부여

42

### 3.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제언

#### 구조적 딜레마

- ❖ **현행 정치적·제도적 구조는 미래세대의 이해를 반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움**
  - 우리나라를 포함한 현존하는 국가들의 대부분의 공식적인 제도들은 현 세대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부여 받도록 제도화
- ❖ **의사소통구조, 정책결정구조에 미래세대를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
  -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인 미래세대의 목소리와 이해를 측정하거나,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 ❖ **누가 미래세대를 대표할 것인가?**
  - 현세대의 누가 미래세대를 대신하여 대표성을 갖고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지 불명확
- ❖ **세대간 형평성과 상생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 세대 간 공평한 자원배분의 기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음

43

### 3.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제언

#### 우리나라 입법부를 향한 몇 가지 제언

##### 현행 비례대표제의 활용

- 직능 중심의 현재의 비례대표 기능을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기능으로 전환
-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들은 현행 유권자(현세대)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미래세대의 권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옹호

##### 미래세대 상임위원회 설치

- 미래세대의 대표자로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래상임위원회를 구성
- 미래세대의 권익을 대변하고 세대 간 상생 등 미래 이슈에 관한 입법 활동, 예산 및 결산 심의, 국정 감사를 수행

##### 미래부채심의제도 도입

- 예산심의 단계에 있어서 국회가 정부에게 장기적인 예산건전성의 확보계획을 요구하도록 제도화
-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10년 후에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 국가부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

##### 제4의 기관: 미래세대 옴부즈맨 신설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는 독립적인 기구로 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맨' 또는 '미래세대위원회'를 설립
- 장기적 시계에서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이슈들(복지, 조세, 대규모 국책사업 등)을 공론화 하고 정기적인 공개 토론 개최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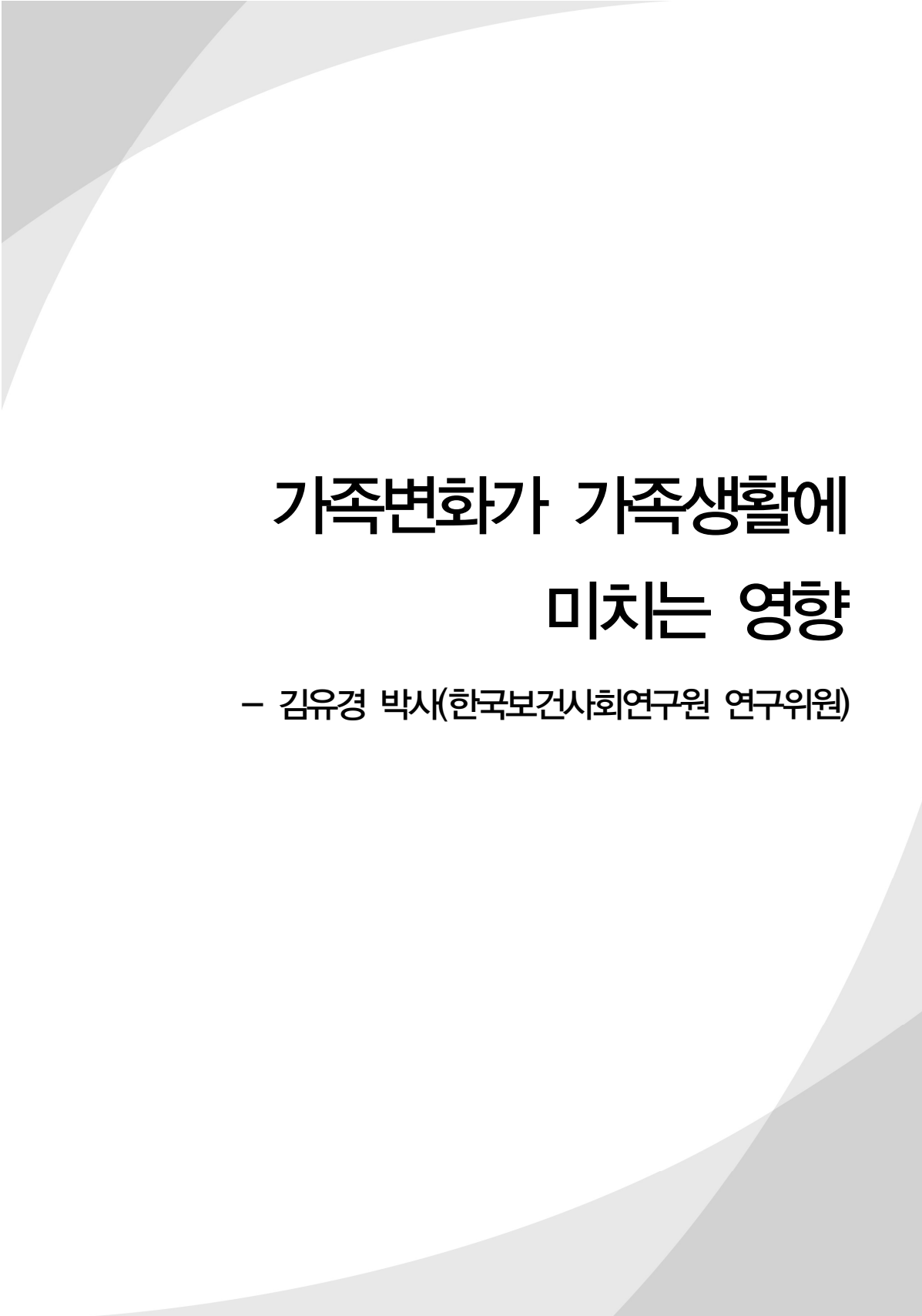
Future Generations: They are Our Conscience!

— Jim Dator —

農夫餓死 枕厥種子!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종자는 배고 죽는다!)

- 耳談續纂 -





# 가족변화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 김유경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가족변화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김유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6. 09. 07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

## Content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

문제제기

II

가족환경 변화

III

가족갈등 양상

IV

가족부양 특성

V

정책과제

㉠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행으로 개인주의화, 고령화에 따른 노인증가, 만혼현상, 이혼율 증대, 저출산 등 인구학적 변화와 세대 간 부양의식 약화로 가족부양 및 돌봄 등 가족기능 공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다른 한편 개인주의 팽배와 전통적 성역할 혼재,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 단절 등으로 가족 간 갈등의 심화가 예상되며 가족기능과 세대 간 유대감 약화는 부양환경의 취약화를 초래하고 부양 및 돌봄기능 공백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발생을 야기하여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됨
- 급증하는 세대갈등과 취약한 부양환경에 대비하여 가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생활 특히 가족관계 및 가족 부양의 변화에 대한 진단이 요구됨

㉡ 기존 통계와 조사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과 2015년에 실시한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자료와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환경변화와 가족갈등양상 및 가족부양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주1)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8.21~9.1일까지 전화조사로 실시되었고, 조사대상은 전 국민 만 19세~69세 이하의 남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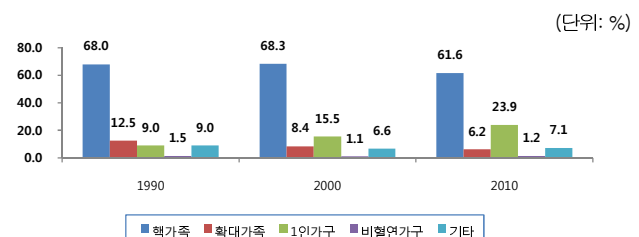
주2)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8.27~9.10일까지 전화조사로 실시되었고, 조사대상은 전 국민 중 만 20세~64세 이하의 남녀임.

## II. 가족환경 변화

### ㉠ 가족구조 및 가구주 구성의 변화

- 소가족화에 따른 가족유형은 1인가구는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증가하였고,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동 기간 68.0%에서 61.6%로 과반수이상을 상회하여 1인 가구 및 1~2세대 중심의 핵가족화 형태에 집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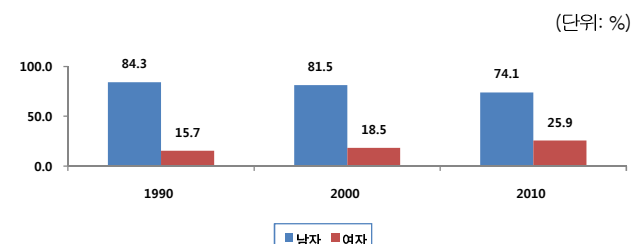
[그림1] 가구유형변화추이(1990~2010)



자료: 1) 통계청(1990, 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가구주의 성별분포는 1990년에는 남성 가구주가 84.3%, 여성가구주는 15.7%로 남성이 여성보다 5.4배 많았고, 2010년에는 각각 74.1%와 25.9%로 남성이 여성보다 2.9배 많아져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그림2] 가구주의 성별 분포 변화



자료: 1) 통계청(1990, 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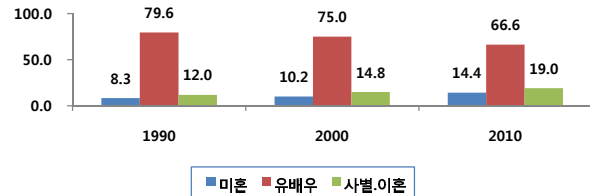


## II. 가족환경 변화

- 가구의 혼인상태별 분포는 1990년에는 유배우 79.6%, 사별과 이혼 12.0%, 미혼 8.3%에서 2010년에는 각각 66.6%와 19.0%, 10.2%로서 20년 간 유배우 가구는 점차 감소하고 이혼·사별 및 미혼 가구의 분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3] 가구의 혼인상태별 분포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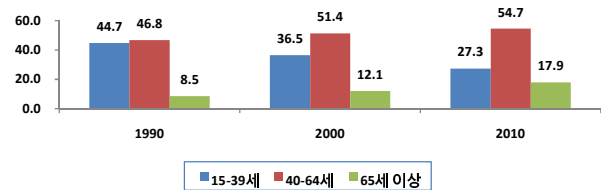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90, 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가구의 연령분포는 1990년에는 15~39세 연령층이 44.7%, 40~64세 연령층은 46.8%, 65세 이상은 8.5%로 중년층 이하보다 장년층이 다소 높다가 2010년에는 각각 27.3%, 54.7%, 12.1%로 20년 간 중년층 이하는 큰 폭으로 감소한데 비해, 장년층과 노년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4] 가구의 연령별 분포 변화

(단위: %)



자료: 1) 통계청(1990, 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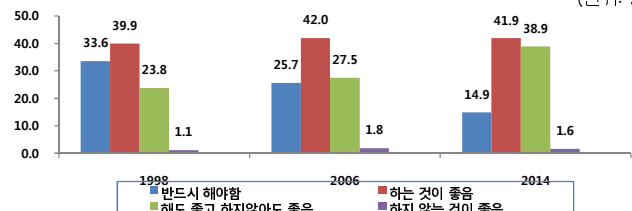
## II. 가족환경 변화

### ㉠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의 변화

- 가족가치관 중에서 가족형성과 관련이 높은 혼인가치관을 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1998년 73.5%에서 2014년에는 56.8%로 16년간 16.7%p가 감소한데 비해, 중립적인 태도는 동기간 30%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부정적인 태도도 1998년 1.3%에서 2014년 2.0%로 소폭 증가함

[그림5] 혼인가치관의 변화(1998~2014)

(단위: 명)



- 부부가치관은 전반적으로 부부간의 역할에 대해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취업 및 가사분담 등에 대해서는 다소 양성평등적인 가치관이 반영됨

- 성역할에 대한 태도변화를 보면 2012년 '아내는 남편의 경력 쌓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찬성이 반대보다 2배 많았고,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반대가 찬성보다 다소 높았음
- 2014년에는 전자는 반대가 찬성보다 1.6배 많았고, 후자는 찬성이 다소 높아지면서 찬성과 반대 간에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서 부부 간 위계적이고 양성 불평등적인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차적으로 약화되어가고 있음

[표 1] 성역할에 대한 태도(2012, 2014)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아내는 남편의 경력 쌓기에 도움을 주어야 함	2012	3.3	30.3	57.9	8.5	100.0(10,052)
	2014	18.9	42.2	28.8	10.1	100.0( 983)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족을 돌보아야 함	2012	7.0	46.3	41.0	5.7	100.0(10,052)
	2014	13.8	35.6	38.7	11.9	100.0( 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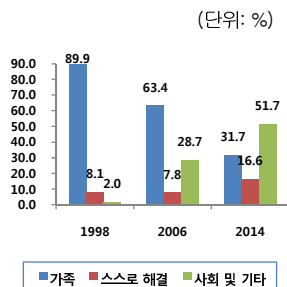
자료: 1)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유경 외(2014),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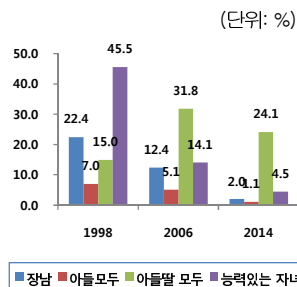
## II. 가족환경 변화

- 부모부양 책임에 대한 태도는 최근으로 오면서 가족에서 점차 사회 및 기타에 대한 견해가 높아지면서 사회화의 경향이 높았고, 가족 중에서도 모든 자녀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능력 있는 자녀, 장남과 아들 모두 순으로 나타나서 장남·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이 상당히 약화됨
- 이와 같이 약화된 가족부양관에 비해 소자녀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부모 부양의 부담증가는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 갈등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

[그림6] 부모부양 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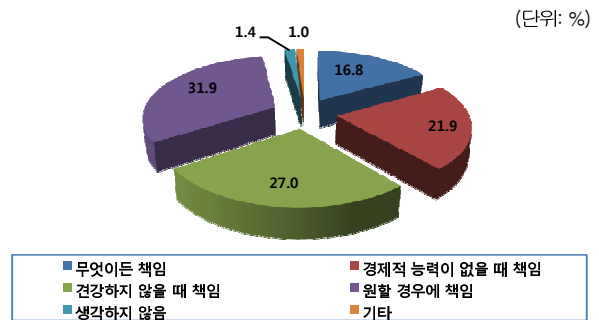
[그림7] 가족 중 부모부양 책임자



주: 분석대상은 1998~2010년에는 15세 이상인구, 2012년은 13세 이상 인구임  
자료: 통계청(1998~2014), 사회조사결과

- 노부모 부양책임은 무엇이든 책임진다가 16.8%,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건강하지 않을 때, 부모가 원할 때 책임진다는 합친 비율은 80.8%로 자발적인 부양보다 수동적·조건적인 부양관이 자리 잡고 있음

[그림8] 노부모부양 책임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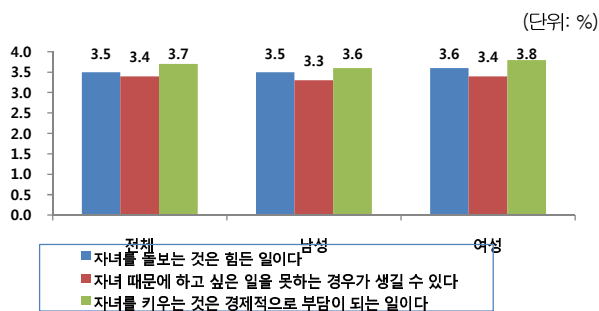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 II. 가족환경 변화

-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를 보면 대체로 전체와 남녀 모두 중립적인 의견(3.3~3.8점)으로 그중에서 경제적 부담, 자녀돌봄, 그리고 일가정 양립 등의 순으로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그림9]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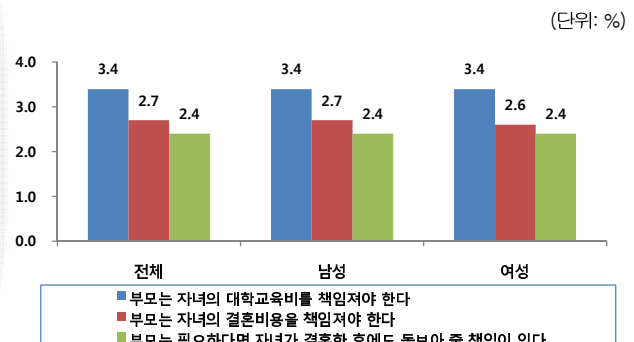


주: 점수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음)~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됨.  
자료: 여성가족부(2015), 2015년 제3차 가족실태조사

-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책임 범위는 대학교육(3.4점)만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자녀결혼(2.7점)과 그 이후에 대한 돌봄(2.4점)은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성별로도 유사함

- 자녀양육 책임 상한선에 대한 태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초혼연령 상승 및 미혼인구 증가로 현실적으로는 자녀결혼 전의 상당기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이 예상되어 가족갈등의 증폭이 예상됨

[그림10]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책임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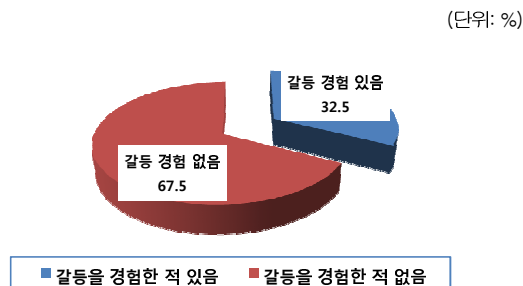


### Ⅲ. 가족갈등 양상

#### ㉠ 가족갈등 발생 수준

- 2014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1,000명의 응답자 중에서 가정 내에서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32.5%로 1/3 정도가 가족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11] 가족갈등 경험 발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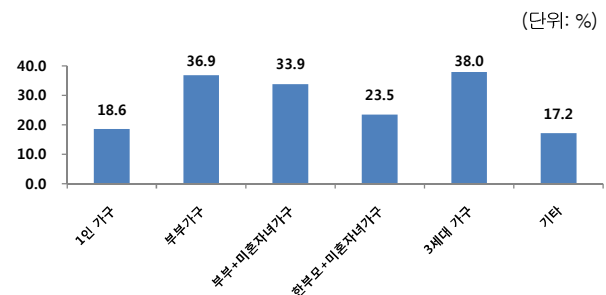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 가구형태별로는 3세대가구가 가족갈등 경험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부가구, 부부 또는 한부모와 미혼자녀, 1인 가구, 기타 가구 순으로 가족 간에 갈등 경험이 높은 특성을 보임

-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가족갈등 경험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이해 및 의사소통 부족 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해석됨

[그림12] 가구형태별 가족갈등 경험 발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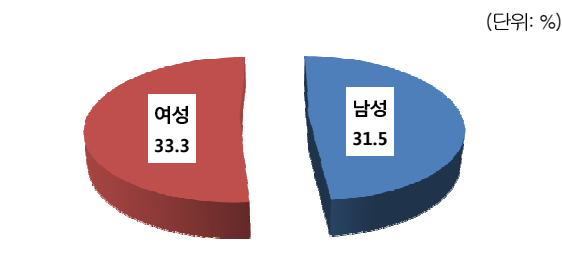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 Ⅲ. 가족갈등 양상

- 가구주 성별로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보다 가족갈등 경험이 다소 많았으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13] 가족갈등 경험 발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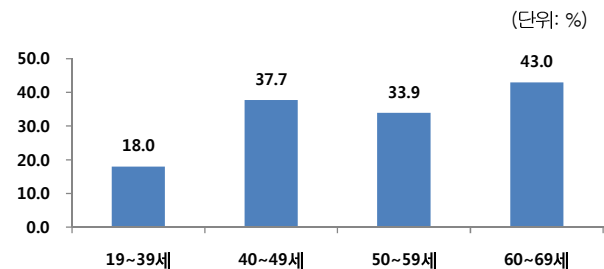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 가구주 연령별 가족갈등 경험비율은 18.0~43.0%로 50대를 제외하면 대체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족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구주 연령은 가족주기와 관련이 높으며 중년층 이하보다 장년층 이상에서 가족갈등이 높은 것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족확대기와 자녀를 출가시키고 부부만이 남는 가족축소기 과정에서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함

[그림14] 가구형태별 가족갈등 경험 발생 수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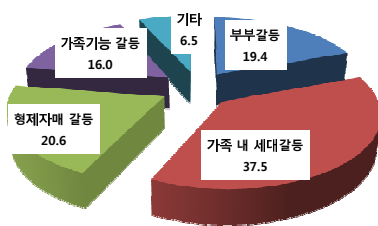
### Ⅲ. 가족갈등 양상

#### ㉠ 가족갈등 유형별 발생 수준

- 최근 1년간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갈등 유형은 가족 내 세대갈등이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20.6%로 많았으며, 이어서 부부갈등이 19.4%, 가족기능상에서 오는 갈등 16.0%, 기타 6.5% 순으로 나타남

[그림15] 가족갈등 유형별 발생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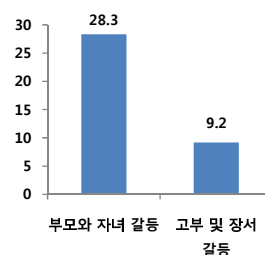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주: 가족갈등유형의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 중 가족갈등을 경험한 325명임

- 가족 내 세대갈등 중에서는 부모와 자녀갈등이 28.3%로 많았고, 고부 및 장서 간 갈등도 9.2%로 적지 않으며, 형제자매 간의 갈등 중 친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16.3%로 많고, 동서 간 갈등은 4.3%로 적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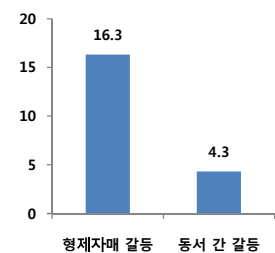
[그림16] 가족 내 세대갈등 발생 수준

(단위: %)



[그림17] 형제자매 간 갈등 발생 수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 Ⅲ. 가족갈등 양상

- 가족기능상 갈등 중에서는 가족돌봄 및 상속갈등은 9.2% 이었고, 일가족 갈등은 6.8%로 나타남

- 이는 우리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주로 부모 자녀 간의 세대갈등, 부부갈등과 부모부양과 상속 등으로 인한 형제자매 갈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 가구형태별로는 1인 가구는 형제자매 갈등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모와 자녀 갈등과 일가족 갈등이 높은 편인데 비해 부부가구는 부부갈등이 높았고, 형제자매와 동서 간에 갈등도 높은 편이며 가족 돌봄 및 상속갈등도 타 가구보다 높음

-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부부갈등과 가족 내 세대갈등이 62.7%로 과반수를 초과하고, 3세대가구는 가족 내 세대갈등이 48.1%로 거의 과반수를 보이며, 형제자매 간 갈등과 가족돌봄 및 상속갈등, 그리고 일가족 갈등도 높은 편임

[그림18] 가족갈등 유형별 발생 수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표 2] 가구형태별 최근 1년간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갈등 유형

(단위: %, 명)

구분	가족내세대갈등						가족기능갈등		기타	계수
	부부갈등	부모와 자녀갈등	고부 및 장서갈등	친형제자매갈등	형제자매갈등	동서간갈등	가족돌봄 및 상속갈등	일가족갈등		
전체	194	283	92	-	163	43	92	68	65	1000(325)
1인가구	-	211	-	-	263	-	105	211	211	1000(19)
부부가구	290	177	32	-	177	81	129	16	97	1000(62)
부부미혼자녀가구	198	316	113	-	142	42	80	57	52	1000(212)
3세대가구	74	333	148	-	185	-	111	148	-	1000(27)
기타	200	200	-	-	400	-	-	200	-	1000(9)

주: 가구형태에서 부부+미혼자녀가구에는 한부모+미혼자녀가구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 Ⅲ. 가족갈등 양상

- 가구가 남성인 경우는 여성에 비해 부부갈등과 친형제자매 간 갈등, 그리고 일가족갈등이 다소 높았고, 여성인 경우는 남성에 비해 부모와 자녀 간과 동서 간 갈등, 그리고 가족돌봄에서 오는 갈등이 높은 편임
  - 성별 갈등유형의 차이는 성별 간에 역할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됨
-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타 연령층에 비해 부모와 자녀 간 갈등과 고부 및 장서 간 갈등 등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많으며, 40대는 부부갈등과 일가족 갈등이 많음
  - 50대는 친형제자매와 동서 간 갈등이 많았고, 가족돌봄과 상속갈등도 다소 많으며, 60대는 부모와 자녀 간과 친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많은 편임
  - \* 가구주의 연령별 갈등유형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가족주기별 가족갈등 발생요인이 갈등유형으로 나타남

[표 3] 가구형태별 최근 1년간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갈등 유형

(단위: %, 명)

구분	가족관계갈등						가족기능갈등		가타	계수
	부부 갈등	가족내 세대갈등			형제자매 갈등		가족돌봄및 상속갈등	일가족갈등		
		부모와자녀 갈등	고부및장서 갈등	조부모와손자녀 갈등	형제자매갈등	동서간갈등				
전체	238	179	60	-	232	33	79	106	73	1000(151)
가구주 성										
남성	246	164	74	-	254	25	74	107	57	1000(22)
여성	207	241	-	-	138	69	103	103	138	1000(29)
가구주 연령										
19~39세	240	280	120	-	160	-	-	80	120	1000(25)
40~49세	269	154	77	-	173	38	96	154	38	1000(52)
50~59세	225	75	50	-	275	75	100	100	100	1000(40)
60~69세	206	265	-	-	324	-	88	59	59	1000(34)

주: 분석대상은 가족갈등 경험자 325명 중 가구주 151명만 해당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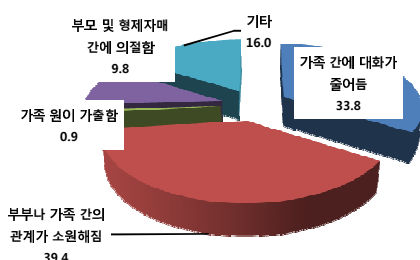
### Ⅲ. 가족갈등 양상

#### ⊕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변화

-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는 소통단절로 부부나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39.4%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는 33.8%로 많으며, 갈등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의절하는 비율도 9.8%로 적지 않고, 1% 미만이나 갈등으로 가족원이 가출한 경우도 발견됨
  - 이는 가족갈등으로 인해 가족 간에 소통단절부터 의절까지 심각한 양상을 보여서 가족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19]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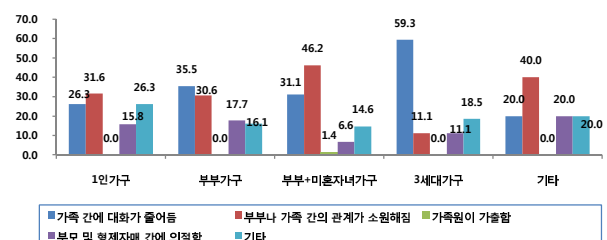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 가구형태별로는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특히 1인가구는 갈등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간에 왕래가 없고 의절한다는 비율이 15.8%로 전체보다 높았으며, 부부가구는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와 부모 및 형제자매 간에 의절하는 경우가 많음
  - 부부와 미혼자녀가구는 소통단절로 부부나 가족관계가 소원해 지는 경우, 3세대가구는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 많음
  - \* 이와 같이 가족갈등으로 부정적인 변화는 가구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1인가구와 부부가구는 가족 간에 의절까지 이르는 심각한 양상을 보임

[그림 20] 가구유형별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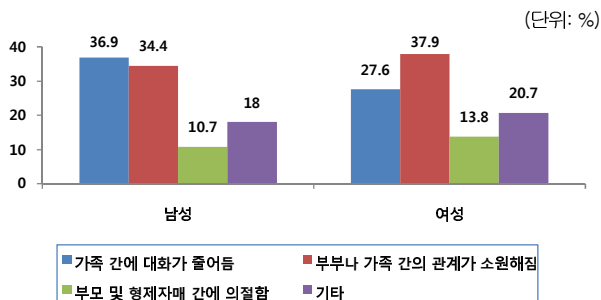
주: 분석대상은 가족갈등을 경험한 325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 III. 가족갈등 양상

- 가구가 남성인 경우는 여성보다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여성은 소통단절로 가족관계가 소원해 지거나, 의절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갈등으로 심각한 부정적 변화를 보임

[그림21] 가구의 성별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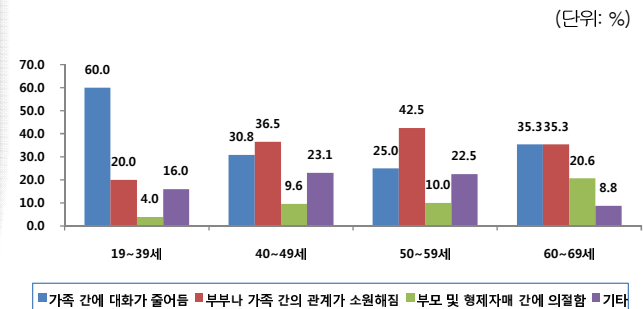


주: 분석대상은 가족갈등 경험자 325명 중 가구주 151명만 해당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 가구주 연령별로는 19~30세 이하는 타 연령층에 비해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40세 이상은 소통단절로 가족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60대는 왕래가 없고 의절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갈등으로 부정적인 변화의 단계가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임.

- 이는 고연령층의 경우 부양 및 상속으로 인해 성인자녀와의 세대갈등이 예상되며 다른 갈등에 비해 극단적인 결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그림22] 가구주의 연령별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변화



주: 분석대상은 가족갈등 경험자 325명 중 가구주 151명만 해당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 IV. 가족부양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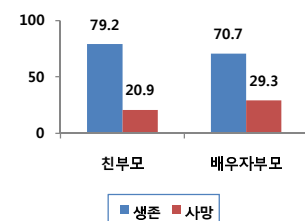
#### ② 부모생존·동거 및 부양비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5년에 실시한 '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에서 친부모 중 한 명 이상 생존한 응답자는 791명으로 조사되고, 그중 친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36.9%로 1/3에 불과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보호 받는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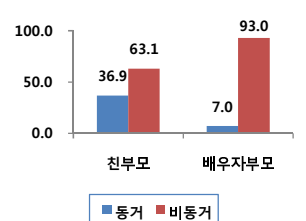
- 배우자부모 중 한 명 이상 생존한 응답자 474명 중에서 배우자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7.0%로 상당히 미미함

- 부모가 생존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부모를 부양하는 비율은 56.7%로 과반수를 상회하고, 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33.9%로 1/3을 상회하고, 배우자 부모는 15.8%로 친부모 부양의 절반에 못 미치고, 친부모와 배우자 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경우는 7.1%로 나타남

[그림23] 친부모 및 배우자 부모 생존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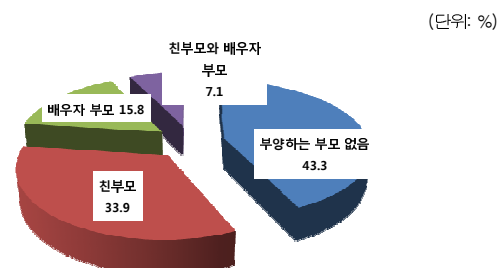


[그림24] 친부모 및 배우자 부모 생존여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그림25] 최근 1년간 부모 부양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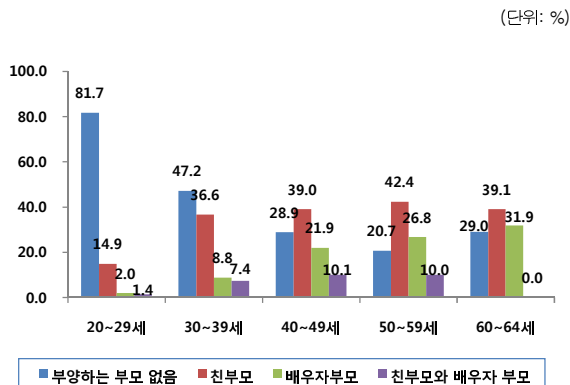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 IV. 가족부양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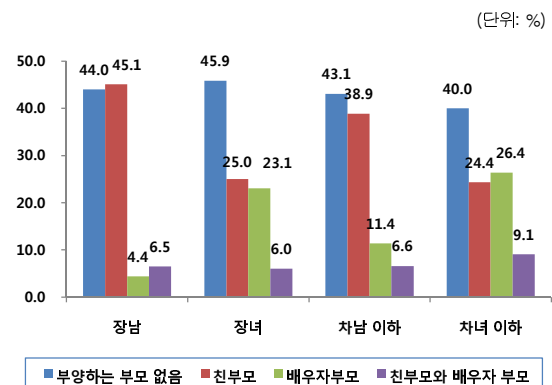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응답자 연령이 많은 경우 부모를 부양하는 비율은 대체로 높았고, 형제자매 순위별로는 친부모 부양은 장남과 차남이 많은데 비해, 배우자 부모는 장녀와 차녀가 많은 편이나, 친부모 부양도 낮지 않은 비율을 보여서 기존 장남 또는 아들중심의 부양관습이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26] 연령별 최근 1년간 부모 부양 비율



주: 분석대상은 친부모 및 배우자 부모가 생존한 응답자 882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그림27] 형제자매 순위별 최근 1년간 부모 부양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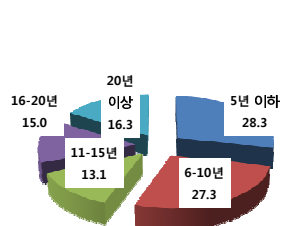
주: 분석대상은 친부모 및 배우자 부모가 생존한 응답자 882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 IV. 가족부양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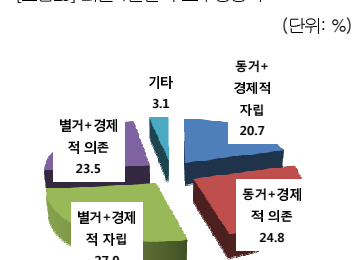
### ⑤ 부양기간 및 부양 방식

- 부모를 부양하는 응답자 501명을 대상으로 부모를 부양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11년 이상이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년 이하가 28.3%, 6~10년은 27.3% 순이었으며 평균 부양기간은 12.9년으로 나타남
- 응답자 연령별로 부양기간의 분포는 부양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서 응답자가 고 연령층인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건강상태가 나쁜 고령의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경제적·정신적·육체적으로 부양부담이 배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 연령층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부모를 부양하는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와 자녀가 별거하면서 부모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형태는 27.9%(1/4),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는 24.8%,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는 23.5%,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형태는 20.7%로 부양방식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임
  - 부양형태는 자녀동거가 45.5%, 자녀별거는 51.4%로 별거가 동거보다 다소 많았고, 경제적 의존여부는 자녀에게 의존이 48.3%, 경제적 자립은 48.6%로 비슷한 비율을 보임

[그림28] 최근 1년간 부모부양기간 분포



[그림29] 최근 1년간 부모부양방식



주: 분석대상은 부모를 부양하는 응답자 501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표4] 연령별 부모부양 기간

(단위: %, 명,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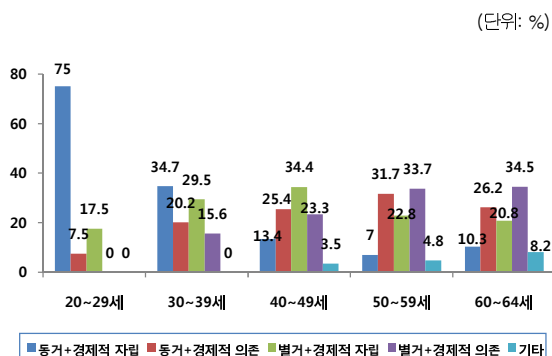
구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0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8.3	27.3	13.1	15.0	16.3	100.0(501)	12.9
응답자의 연령							
20~29세	81.5	14.2	0.0	0.0	4.3	100.0(35)	4.3
30~39세	42.0	37.8	13.0	7.1	0.0	100.0(118)	7.9
40~49세	16.5	29.7	18.6	23.3	11.9	100.0(171)	13.5
50~59세	18.4	21.5	12.2	15.2	32.7	100.0(149)	17.0
60~64세	28.2	15.6	0.0	15.3	40.9	100.0(27)	19.8

자료: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전화 조사결과임.

## IV. 가족부양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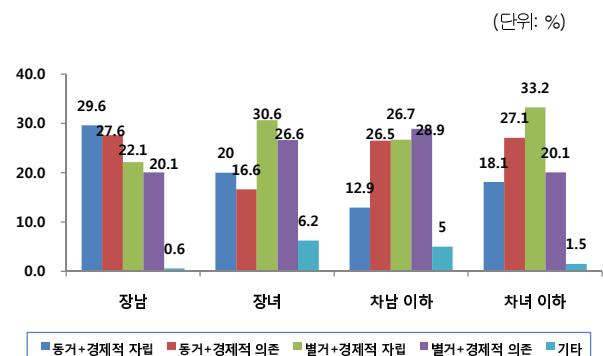
- 응답자의 연령별 부양방식은 20대인 경우는 자녀와 동거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자립형태가 75.0%로 편중되며, 30대도 20대와 유사하고, 40대는 자녀와 별거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자립형태가, 50~64세는 자녀와 별거하면서 경제적 의존형태가 많아서 고 연령층으로 오면서 자녀와 비동거 형태의 경제적 의존 방식이 많은 경향을 보임
- 형제자매순위별로는 응답자가 장남인 경우는 자녀와 동거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자립 또는 경제적 의존형태가 많은 편이고, 차남은 부모와 별거하면서 경제적 의존형태가, 장녀와 차녀는 자녀와 별거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자립형태가 많아서 대체로 아들인 경우 딸보다 경제적 의존방식이 많음

[그림30] 연령별 부모 부양방식



주: 분석대상은 부모를 부양하는 응답자 499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그림31] 형제자매 순위별 부모 부양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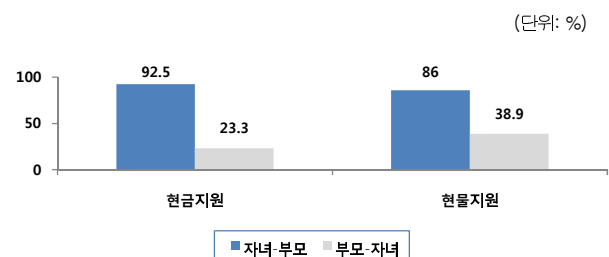
주: 분석대상은 부모를 부양하는 응답자 499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 IV. 가족부양 특성

### ② 부양교환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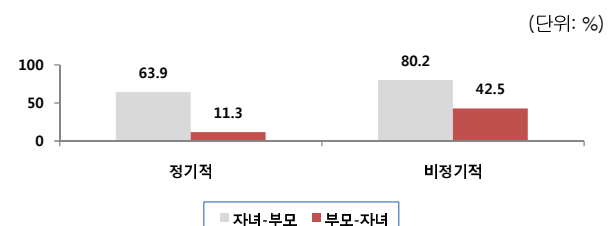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부양유형을 보면, 현금지원이 92.5%, 현물지원은 86.0%로 두 가지 모두 다수가 지원하였으며 현금이 현물보다 다소 많음
  -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부양은 현금지원이 23.3%, 현물지원이 38.9%로 현물이 현금보다 다소 많고, 제공 비율도 부모부양이 자녀부양보다 현금은 4배, 현물은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경제적 부양에는 용돈, 생활비, 병원비, 부동산 구매 등의 현금지원과 여행 및 관광,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 및 음식물 등의 현물지원이 포함됨
- 지난 1년간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부양빈도는 정기적 지원이 63.9%, 비정기적 지원은 80.2%로 비정기적 지원이 정기적 지원보다 많음
  -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정기적 지원이 11.3%, 비정기적 지원은 42.5%로 자녀는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부양하는 편인데 비해 부모는 자녀에게 비정기적으로 부양하는 경향을 보임
  - \* 경제적 부양에는 용돈, 생활비, 병원비, 부동산 구매 등의 현금지원과 여행 및 관광,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 및 음식물 등의 현물지원이 포함됨

[그림32] 부양유형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주: 분석대상은 부모를 부양하는 응답자 501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그림33] 부양빈도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주: 분석대상은 부모를 부양하는 응답자 501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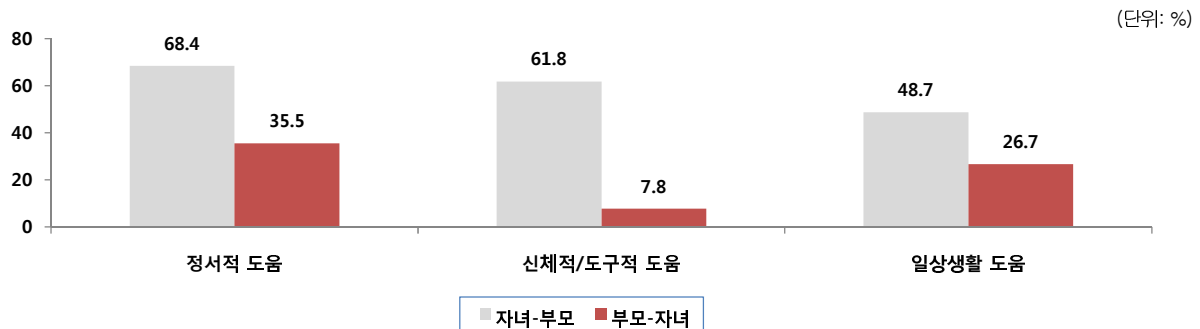


## IV. 가족부양 특성

- 지난 1년간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한 비경제적 부양은 정서적 부양이 68.4%, 신체적/도구적 부양은 61.8%로 과반수를 상회하고, 일상생활 부양은 48.7%로 다른 부양에 비해 다소 낮음

-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부양은 정서적 부양이 35.5%로 가장 많고, 일상생활 부양은 26.7%이며, 신체적/도구적 부양은 7.8%로 미미함
- \* 대체로 자녀와 부모 모두 정서적 부양을 주고받았으며, 이외에 자녀는 신체적/도구적 부양을, 부모는 일상생활 부양을 많이 주는 편으로 나타남
- \* 비경제적 부양서비스에는 고민상담 등의 정서적 도움, 간병·수발·병원동행 등의 신체적·도구적 도움, 그리고 청소·식사준비·세탁 등의 일상생활 도움이 포함됨

[그림34] 부양빈도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주: 분석대상은 부모를 부양하는 응답자 501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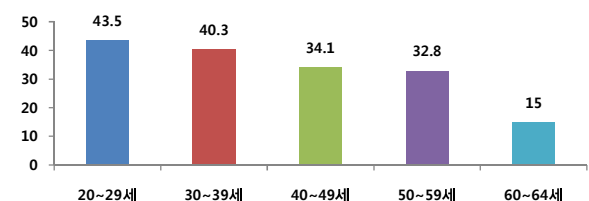
## IV. 가족부양 특성

### ④ 부양비용 및 부담정도

- 지난 1년간 부모를 부양한 비용은 월평균 34.8만원으로 조사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월평균 43.5만원으로 가장 많고, 60~64세는 월평균 15만원으로 가장 적어서 젊은 연령층에서 부양비용을 더 많이 부담함

[그림35] 연령별 지난 1년간 월평균 부양비용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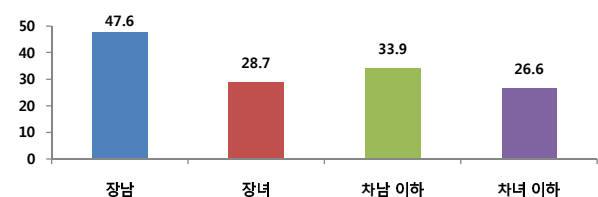
주: 분석대상은 부모를 부양하는 응답자 501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 형제자매 순위별로는 장남이 월평균 47.6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12.8만원이 더 많은데 비해, 차남 이하는 월평균 33.9만원, 장녀와 차녀 이하는 각각 월평균 28.7만원과 26.6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월평균 0.9~8.2만원까지 적음

- 아들과 딸의 부양비용도 월평균 5~21만원까지 차이를 보임

[그림36] 형제자매 순위별 지난 1년간 월평균 부양비용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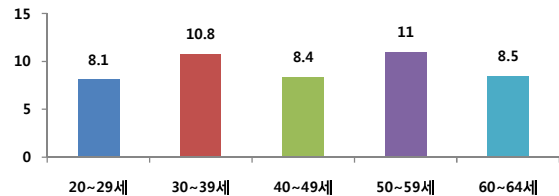
주: 분석대상은 부모를 부양하는 응답자 501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 IV. 가족부양 특성

- 지난 1년간 부모 부양으로 지출한 비용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런대로 감당할 만하다는 비율이 55.8%로 절반을 넘고, 응답자의 24.6%인 1/4는 가계에 부담을 느끼며, 전혀 부담되지 않는 비율은 19.6%로 1/5에 해당됨

[그림37] 연령별 부양비용의 가계소득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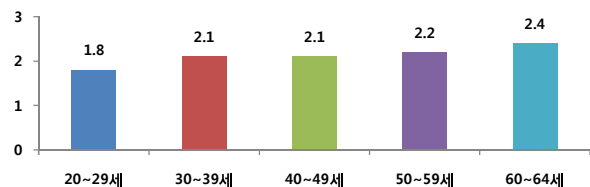


주: 가계소득 부담정도는 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부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 연령별로 가계부담정도는 60~64세가 4점 만점에 평균 2.4점으로 가계 부담이 가장 높고, 20대는 1.8점으로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고 연령층에서 부양으로 경제 부담이 큰 것을 의미함

[그림38] 연령별 부양비용의 가계소득 부담정도

(단위: %)



주: 가계소득 부담정도는 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부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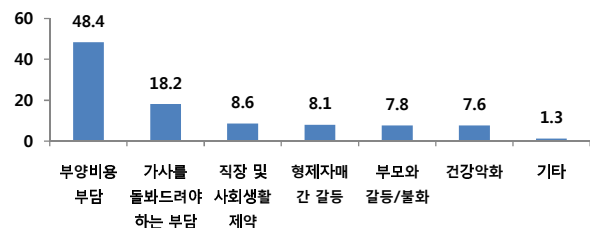
## IV. 가족부양 특성

### ② 부양상의 어려움

- 부양상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부양비용 부담이 48.4%로 거의 과반수에 이르며, 다음은 자주 찾아뵙고 가사를 돌봐드려야 하는 부담이 18.2% 많고, 이어서 직장 및 사회생활 제약, 형제자매 간 및 부모와의 갈등, 건강악화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39] 부모 부양상의 어려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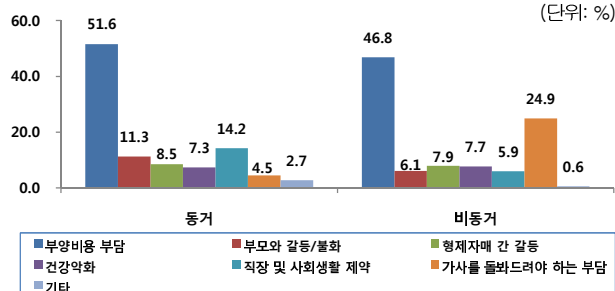


주: 분석대상은 부모를 부양하는 응답자 501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 부모동거 여부별로 부양상의 어려움을 보면, 공통적으로 부양비용의 부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부양비용과 부모와의 갈등, 직장 및 사회생활 제약 등으로 조사되었고, 부모와 비동거인 경우는 부모를 찾아뵙고 가사를 돌봐드려야 하는 부담이 주요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림40] 부모동거 여부별 부양상의 어려움

(단위: %)



주: 분석대상은 부모를 부양하는 응답자 445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전통적 확대가족과는 달리 고립화된 핵가족(isolated nuclear families)에서는 가족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재하고 조정하는 기제가 없어 감정적 표출이 쉽게 되며, 이로 인해 가정폭력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갈등으로 인한 결과는 가족의 응집력과 탄력을 약화시키므로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실천과제로 가족상담 및 치료서비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응집력 및 탄력은 가족관계가 양호할 때 높으므로 가족응집력 제고를 위해 가족관계향상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됨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가족단위의 교육 및 전문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가족프로그램 및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치료 등 전문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함
  - 가족기능강화를 위해 가족지지를 제고하는 자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족 간에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훈련, 의견을 지지하는 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지지 능력을 제고함
- 부부 및 세대 간 유대강화를 위해 위계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민주적·합리적인 관계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대화 및 의사소통 강화, 공유하는 시간 확대 등의 가족차원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함
  - 부부 및 세대 간 이해증진 프로그램과 가족단위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여가 및 체력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친밀감을 제고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부모부양 및 상속갈등을 초래하는 전통적인 가족문화에서 탈피하여 민주적·양성평등적인 가족문화가 정립되어야 함**

- 집안명절 및 제사 행사 등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양성 평등적인 가족문화 및 관습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함
- 가족 내 부양 및 돌봄의 불평등적 구조적 개선을 위해 노부모 돌봄을 비롯한 가족 내 사안에 대해 형제자매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책임을 분담하며,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장남가족에게만 부양의 의무를 강요하기 보다는 애정에 기반한 형제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모델을 개발하고 홍보되어야 할 것임

**소가족화·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가치관 약화는 세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쳐 부양환경 기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실증적 자료에서도 발견되어 사회적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족가치 강화와 함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최근 자녀관은 기존 자녀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부부 및 가족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자녀양육범위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노부모 부양관은 가부장적 부양관 약화와 함께 사회화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실제 생활비부담도 부양관을 반영하여 노인 스스로 해결 또는 자녀의 지원이 거의 98%이상을 차지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생활비를 자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졌으며 이는 자녀순위 및 아들·딸에서도 차별적으로 나타나서 형제자매 간에 부양갈등의 구조적인 특성을 보임

- 세대 간 가족부양관의 약화와 함께 소가족화·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가족부양 체계의 불안정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가족부양 환경기반 마련을 위해 가족과 사회, 정부 간 바람직한 가족부양 분담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다원화·전문화되는 부양욕구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부양형태는 가족, 지역공동체, 사회 및 국가 등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다양한 부양 주체가 상호 간 공조해야 하는 부양주체의 다원화 요구됨
- 가족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가족부양의 공사 간 분담 방향은 정서적부양은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하되 경제적 부양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가족욕구와 경제력에 따라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가능함

# 감사합니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